



보도일시	2021. 1. 29(금) 15:00 (회의 종료 후) 사용	배포일시	2021. 1. 29(금) 10:00 배포
비고	* 모두말씀 별도배포		
담당부서	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	담당자	기획총괄부장 고관규, 서기관 최두영 (02-2100-2034)

## 정세균 국무총리, 제1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

#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! 테러 예방활동 및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

- ◆ '21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: 선제 예방, 신속·충력대응 위한 9개 중점과제
- ◆ 지역 대테러 역량 강화 위한 충남·전남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설
- ◆ 통합작전 능력 향상 위한 軍 보유 대테러역량 관계기관 지원 강화
- ◆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피해 예방 강화대책 등 재외국민 보호활동 주력

□ 정부는 1월 29일(금)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\*를 개최했습니다.

\* 「테러방지법」 제5조에 의거 구성·운영, 위원(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)

○ 오늘 회의에는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했습니다.

- 금년도 「국내외 테러 정세 평가」를 반영한 「2021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」과 경찰청 대테러 역량 보강을 위한 「충남·전남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지정」을 심의·의결하였으며
- 「軍 보유 대테러 역량 관계기관 지원방안」, 「서아프리카 해역 해적 피해 예방 강화대책」등을 마련했습니다.

□ 정 총리는 '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'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절대적인 소명이라고 하면서 국내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테러 예방활동 및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## ① '21년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(심의·의결)

### < 2020년 성과 >

-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국민 8명을 무사 귀환시켰고 국제테러정세 악화\*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
- 테러단체 자금지원 외국인 7명을 사법처리하였고, 총포 등 위험물품 5만여건을 적발·처리하는 등 테러위해 요소를 제거하였고
- 드론테러 예방·대응에 필요한 「전파법」 개정을 완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인천공항에 드론 탐지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.
- 또한,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질산 암모늄 등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.
- 한편, 세종·전북·경북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를 신설하고 軍 대테러 특수임무대를 추가 지정하는 등 대테러역량도 보강하였습니다.

### < 2021년 정세전망 >

- (국제) '코로나19'로 인한 각국 안보역량 분산에 따른 ISIS 등 국제 테러단체의 활동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극우테러 확산도 우려됩니다.
- (국내) 국내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들의 자금조달·지원 등 개별적 테러지원 행위가 지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
  - 도쿄 올림픽(7月)을 계기로 국제 테러단체 연계자들이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를 경유지·은신처로 악용할 소지가 있고
  - 최근 국내에서 테러자금 조달 혐의자들이 대거 사법 처리됨에 따라, 이들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더욱 은밀하게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며
  - 또한, 코로나19 장기화 및 다양한 갈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불만을 품은 인물들에 의한 테러 모방범죄 가능성도 우려됩니다.

## < 2021년 추진계획 >

-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기징후가 발견되면 신속대처하면서 유사시에는 총력대응 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9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
- ① 테러위험인물의 입국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, 국내 활동 여건이 조성되지 않도록 취약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.
- ② 기관별 소관분야에 대한 테러이용수단 및 대상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테러위협 고조 등 취약시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하며 국가 중요행사 안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- ③ UN 등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테러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, 대테러특공대 등 전담조직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응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.
- ④ '코로나 19' 상황 여건에 맞도록 테러정보협의회·화생방테러대응협의회 등 대책기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.
- ⑤ ICAO 등 국제기구와 테마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3D영상 등을 접목한 체감형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.
- ⑥ 해적피해 예방대책 보강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, 대테러활동지침·매뉴얼 등을 수정하여 대응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.
- ⑦ 경찰특공대 추가창설(충남·전남) 및 소방청 화생방 전문인력 충원 등 관계기관 조직·인력을 보강하고 대테러장비도 확충하겠습니다.
- ⑧ AI 및 XR 등 新기술을 이용한 대테러활동 기법을 보완·개발하고 軍 대테러종합훈련장 건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.
- ⑨ 국가중요시설 드론탐지·차단 장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국내 안티드론기술 개발 및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## ② 충남·전남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 지정 (심의·의결)

- 충남·전남지역은 전력·공항·정유·철강 등 국가중요시설이 산재해 있어 집중된 테러예방 활동이 필요하고,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테러전담 조직인 특공대 신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.
- 이에 따라, 2021년도에 창설 예정인 충남·전남지방경찰청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지정했습니다.

## ③ 軍 보유 대테러역량 관계기관 지원 방안 (보고)

- 軍이 보유하고 있는 대테러 작전 노하우를 관계기관 대테러 요원들과 공유하고 일반 연구소에서 분석이 어려운 화학·생물무기 시료 등에 대한 통합분석 체계를 갖추기로 하였습니다.
- 또한, 외국 대테러특공대 교육·훈련 지원 등 대테러 국제 협력을 활성화 하여 군사외교를 확장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## ④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피해 예방 강화 대책 (보고)

- 작년 한해 우리국민 8명이 피랍된 바 있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나이지리아 등 연안국가의 불안한 치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해적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
- 이와 관련 정부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해적피해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'해적피해예방법' 등 관련 법을 개정기로 하였습니다.